

이덕일의 '역사의 창'



홍익인간이 불편한 국회의원들

민형배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12명의원이 '홍익인간' (弘益人間)이란 자구(字句)를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때 큰 소동이 일었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 이념을 천명한 것으로 헌법으로 치면 전문인 셈인데 다음과 같이 돼 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서 '홍익인간'을 빼고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 운운하는 구절로 대체하려고 했다.

이런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소동이 벌어졌고, 항의에 놀란 의원들이 개정안을 철회했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홍익인간'과 '자유와 평등'이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에도 굳이 이를 삭제하려고 한 데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야나나 다름가 교육부에서 성공시대 민주주의 연구소에 홍익인간 삭제를 연구하라는 용역을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간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추종하는 식민사학자들과 한 몸이 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는 학자들을 탄압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말은 해 왔지만 행동은 거꾸로였다. 임시정부 학부국장 김승학 선생을 필두로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피눈물로 쓴 '한국독립사' 현대화 사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을 필두로 '역사 적폐' 청산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열망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4년간 계속해 왔다. 이런 판국에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교육기본법 개악안이 제출되자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처럼 말을 해 왔는데, 홍익인간은 1941년 11월 반포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나오는 이념이다.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건국강령은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역사적 근거를 두었다”면서 '홍익인간과 이화세계'는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라고 선언했다.

임정 주석인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 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바란다. 홍익인간이라는 우리 국조(國祖) 단군의 이상이 이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고, '홍익인간'이라는 휘호도 썼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82년의 '육중서산'에서 '홍익인간의 이상도 공자의 인, 맹자의 왕도정치, 오늘의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연결된 정신을 보게 됩니다’라고 썼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내천' (人乃天)이란 휘호를 좋아했던 이유도 홍익인간 사상이 우리의 민족정신이고 그 원칙이 동학이라는 토착종교를 낳았는데, 최재우가 인내천을 신조로 삼았기 때문이었다. (망명 시절 하버드대 연설)

사실 민주당이 뿌리로 삼는 한민당은 반민족적인 일주 정당이었다. 그나마 김대중·김영삼 두 전 대통령의 지난한 민주화 투쟁과 민족통일을 위한 헌신 덕분에 친일 지주 정당의 딱지를 떼고 민족정당 반열에 오를 뻔했다. 그러나 이른바 586들이 당의 주류가 되면서 민족을 부정하는 사고가 만연하다가 급기야 '홍익인간' 삭제 소동을 일으킨 것이다.

단체 신재호 선생은 1908년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란 논설에서 제국주의 광풍에 맞설 유일한 무기는 민족주의라고 설명했다. 한국 독립운동사는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 민족주의에서 출발한다. 한데 이러한 '민족'을 버리려는 정당에게 어찌 미래가 있겠는가? 이제 민주당의 순기능은 다한 것인가? 지방선거 참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런 정신세계에 있는 것이다.

순국선열들이 목숨 걸고 지켜 냈던 민족의 가치를 민주당 의원들이 지우려는 작금의 작태가 갈 길이 없는 민주당의 현수조를 잘 말해 준다. 여전히 이 나라에서 믿을 것은 역사의 주체이자 민족의 주체인 민중밖에 없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중이염의 예방과 관리



김혜지 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의원 과장

파악하기 위해 순음 청력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청력 검사를 시행한다. 본격 치료를 위해서는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CT)으로 중이염의 범위, 이소골 및 주변 골 조직의 파괴 여부, 내이 구조물에 대한 침범 여부 등을 알아보고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점차 고막에 천공이 생기거나 유착성 중이염, 진주종성 중이염 등으로 악화하기도 한다. 성인의 만성 중이염은 고막에 구멍이 뚫린 소견을 보이는 천공성(비진주종성) 만성 중이염과 고막의 천공 여부와 관계 없이 진주종 형성이 나타나는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다.

귀는 밖으로 돌출되어 있지만 중요한 구조물은 귓구멍 안에 감춰져 있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고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중이염 여부를 쉽게 진단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증상에 따라 구분해 보면 급성 중이염은 고막 안쪽 점막의 염증 때문에 고막이 붉게 보이고 통증과 통증을 수반하고, 삼출성 중이염은 중이 점막의 염증으로 인한 액체가 채워져 수명하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처럼 딱딱하게 들리며, 만성 중이염은 고막에 구멍이 나고 누런 고름이 흘러나오며 청력이 떨어진다.

급성 중이염은 증상과 눈으로 고막을 보는 것만으로도 진단이 되어 초기에 진단이 용이하고 어린이들에서 흔히 생긴다. 항생제에 반응이 좋아 비교적 치료가 잘되는 편이다. 급성 중이염이 있는 동안에는 고열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가 필요하다. 반면에 삼

출성 중이염은 고막에 채워진 염증을 없애는 것이 치료이므로 약 한 달간의 투약으로 말려 본다. 하지만 반응이 없으면 고막에 주사기로 물을 빼내거나 마취를 하고 고막을 제거나 환기관이라고 부르는 조마진 튜브를 고막에 박아 넣어 공기가 튜브를 통해 중이 점막에 직접 닿도록 하여 중이 점막을 말리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

중이염이 더 진행되고 오래 지속된 경우는 아무래도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단계를 지나 누런 고름이 나오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냄새도 나고 가렵기도 하고 잘 안 들리고, 혹은 이명이 심하게 느껴진다. 가장 진행된 형태의 중이염은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일종의 종양성 질환이고 뼈를 녹이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심한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안면마비, 어지럼, 심한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의료·위생 및 경제 관념이 좋아지면서 대표적 후진국형 염증성 질환인 만성 중이염의 빈도 자체가 감소하고 따라서 합병증도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인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아직까지 중이염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보통 급성 중이염으로 시작해 만성 중이염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이염 증상이 의심되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 병의 진행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귀에 통증이 있거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루)이 나오고, 청각 장애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기고

디지털 농업과 데이터의 중요성



김한규 농협 안성교육원 교수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농업 분야도 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면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과학 기술이 접목된 농업의 디지털화가 국내외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디지털 농업은 정밀 농업기술에 첨단 ICT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한 기지개를 투입하고,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 증대 목표만이 아니라 환경성 증대, 안정성 확보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지털 농업의 핵심은 유용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쉰베르거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21세기 권력의 핵심은 데이터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데이터는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과 센서 등을 통해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는 토지·노동·자본 등 기존 생산 요소를 능가하여 농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생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디지털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선 신뢰도 높은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한다. 농업은

수도작·발효사·과수·시설원에·축산 등 분야도 다양하고, 농가별 영농 규모도 차이가 많다. 토양·기상·품종·환경·재배기술 등 데이터의 범위도 광대하다. 개별 농가 단위의 데이터 축적·분석에 의한 농사는 한계가 있고 경제성도 높지 않다.

국가 차원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해야 빅데이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종자의 사레처럼 외국과의 글로벌 기업 등에 데이터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데이터는 축적된다고 해서 저절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여러 데이터가 모이더라도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공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를 가공·분석하고 서비스 제공 범위 등에 대한 로드맵도 필요하다.

디지털 농업 기술의 최종 수요자는 농업인이다. 농업인들은 ICT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이 아직 높지 않다.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과 보급률이 농업 분야에도 빠르게 접목되어 농업인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社說

광주시 미래차 육성 기반 조성 적극 나서야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 준공으로 광주가 자동차산업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하지만 정작 수소차 충전소 등 기반 시설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은 미흡한 것 같다.

시는 그동안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기 위해 2014년 첫 수소충전소를 설치한 데 이어 수소차 보급에도 힘을 쏟아 왔다. 그 결과 광주에서 운행되는 수소차는 1000여 대에 이르고 있지만 현재까지 광주에 설치된 수소차 충전소는 모두 네 곳뿐으로, 하루 평균 92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기존 충전소도 광산구 진곡·동곡동 등 외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운전자들이 충전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사업자 지원 등을 통해 신규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허가권을 가진 자치구는 주민 민원을 신속해 갖가지 핑계를 대며 설립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실제 민간 사업자인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주)는 2년 전 정부의 수

소차 충전소 설치 공모에 도전해 서구와 북구에 각각 한 곳씩 총 60억 원을 지원받게 됐지만, 여태껏 설치 장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준공식을 갖는 GGM도 전국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전기자동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게 된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메카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현대차와 포드·GM·폭스바겐 등 완성차 제조사들이 이미 2030~2040년까지 내연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추세를 봐도 그렇다.

물론 GGM은 일단 4~5년가량 경형 SUV(스포츠투유티티) 기술인 차량의 조립·생산을 통해 제조 기술을 강화한 뒤 전기자동차 수소차 생산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긴 하다. 다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육성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GGM이 후발 주자로 전략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삼성의 미술품 기증 기업의 사회공헌 계기로

삼성 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의 유족들이 상속세 납부 시한을 앞두고 이 회장의 재산 60%가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계획을 공개했다. 12조 원대 규모의 상속세는 올해부터 5년간 분납하고, 1조 원의 사재를 출연해 의료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술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방대한 '이건희 컬렉션'의 국가에 대한 기증이다. 총 2만3000여 점의 작품 가운데 경제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등 고미술품 2만1600여 점은 국립박물관에 기증하게 된다. 의재 허백련과 김환기·천경자·이중섭 등 근대 대표작가 작품 16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작가들의 출신 지역인 광주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남 도립미술관 등지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의 기증은 귀한

문화자산을 해리로 유출하지 않고 국내에 보존함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립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물론 광주 시립미술관과 전남 도립미술관 역시 수많은 걸작을 기증받아 소장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의 품격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이건희 컬렉션'의 국가 기증을 보면서 미술품 기증 활성화를 위해 미흡한 제도 보완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미술품 평가액에 대한 세금 공제나 '상속세 물납세' 도입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다. 이번 삼성 일가의 미술품 기증이 척박한 한국사회의 문화예술 기증 풍토를 바꾸고, 소장 예술품을 시민들과 함께 향유하겠다는 기업인들의 문화적 사회공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無等鼓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가우뚱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곡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만 걸건들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전반이 불안한 상황에서 건설·부동산 경기마저 침체할 것을 우려한다. 여기에 점진적인 시장 안정을 정책 목표로 정하다 보니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대출 규제'와 '증세' 밖에 없다는 게 문제다.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최근 기존 부동산 정책 전반을

집값 잡는 법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정책의 후퇴가 정책 목표 즉 '집값의 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오히려 주택의 공공성을 더 강조해 시장에 병행한 신호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새로운 무기들을 더 과감하게 발출·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공공 임대주택으로 대다수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건설업체들이 짓는 아파트만 넘쳐나는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 시스템은 이제 확 뜯어

고쳐야 한다. 집값의 비정상적인 고공 행진은 공공이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그 사이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의 주류가 돼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지자체 및 기업이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자를 벗어나 타 지역 아파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그 다음 건설업체, 분양 대행사, 대규모 공인중개업체, 투기 세력 등의 담합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후분양 제도 도입, 분양가 공개, 공인 분양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이어 다수

택자(법인 포함)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화해 투기 물량을 토해 내도록 유도하고, 시한이 지나면 보유세를 더 높여 압박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실거주의 주택을 매도할 경우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대다수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집값을 낮추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때다. /윤철성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